



07-47 (통권 278호)

2007.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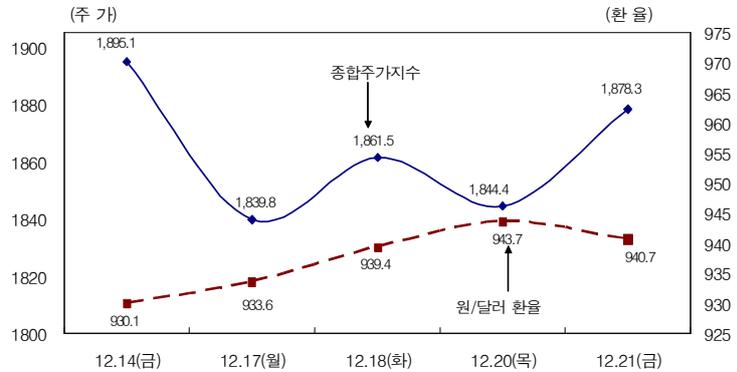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4~12.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1
주간 경제 동향	29
□ 실물 부문 : 원재료 가격 급등세	29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상승	3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거시경제실 : 표한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강대창 연구위원 (3669-4457, dkang@hri.co.kr)
 □ 지식산업실 : 한상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백흥기 연구위원 (3669-4124, hkback@hri.co.kr)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현석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기업전략실 : 허만울 연구위원 (3669-4127, myhur112@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 김영근 연구위원 (3669-4112, kimyg@hri.co.kr)
 □ 컨설팅본부 : 박태일 수석연구위원 (3669-4008, ti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1.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에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2.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①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한국 경제는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2008년에는 명목 GDP가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가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약 40 위권 OECD 내에서는 약 24위에 해당된다. 또한 명목 GDP 1조 달러는 지난 1986년의 1,11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세계 순위 약 10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투자 정체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아너스 클럽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후진국'인 영원한 중진국의 위치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② 부동산 딜레마 가속

2006년 말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시장 정책 기조를 선회하여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부양, 국토 개발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문제로 대변되는 과잉유동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과도한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사용될 경우 경제 내 버블을 확대시키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新4高 역경의 가중(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

2007년에 하반기에 들어 한국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의 신 4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新4高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구조적 원인에 의한 국제 유가 급등,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에 의한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등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 들어서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고유가에 따르는 채산성 하락, 고금리에 의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르는 수출 부진, 고물가에 의한 시장 소비 심리 급랭과 같은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

외환위기 최근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 부문에 대한 비중을 높여 왔으나, 2008년 이후에는 반대로 성장 부문의 정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는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공공 건설 경기 부양, 조세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 소비자신용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2002년의 소비 버블과 이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촉발시켰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새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 (경기부양책)'에 주력할 경우 경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⑤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2008년 국내 기업들은 기존 핵심 사업(core biz)을 강화하는 한편 신수종 사업(new biz) 발굴에 의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신수종 사업 확보를 위해 경제성 측면에서 약 3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M&A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신시장 개척 및 합작 사업의 확대도 전망된다. 한편 핵심 기술 및 핵심 자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행태도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⑥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국민 소득 향상, 고령화 진전, 웰빙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디자인 패션, 컨설팅, 의료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이 국가 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제조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 제조업 자체의 서비스화 등이 진전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에 따르는 금융·의료 서비스간 결합과 같은 지식 서비스 산업 간 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 R&D 역량 활용 필요성 확대, 상품이나 건물 등에 있어서의 디자

인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아웃소싱 지식 서비스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TA 등에 의한 시장 확대로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같은 이유로 국내 시장에 FTA 체결 국가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2008년에는 은행의 수익 기반 약화,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방카슈랑스 진행, 생보사 상장 허용 등에 의해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관행이 무너지면서 은행·증권·보험 간 재편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부문과 증권의 자산관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복합금융플라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 파생상품과 같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 대두 등으로 금융 기관들의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져 금융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⑧ 책임있는 기업(The Responsible Company)에 대한 욕구 증대

정보 환경의 발전에 따르는 기업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 안정성과 사회적 효용 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 제조 책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을 진정한 자산으로 여기며 온정을 베풀고,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경영가족주의'의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창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Strategic Philanthropy)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⑨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2008년은 건국 및 남북 분단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1988년 7·7선언에 의해서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 20주년에 해당된다. 이에 한국의 新성장 동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재평가하고, 남북 간 갈등 해소와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신경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년 남북 경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계·지자체들의 경협 참가 분야 확대, 해주특구 개발, 북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 물류 합작 사업, 종합물류유통센터 건설, SOC 개발 등 새로운 분야로 경협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등이 경협 확대의 폭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⑩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급격한 증가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은 100만 254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의 2%를 넘게 되었다. 이는 3D 업종 기피 현상, 남녀 출산 성비 격차로 인한 국제결혼 증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2008년 예상되는 국내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우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동시에, 과도한 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경직적인 노사 관계 개선, 물류 비용 축소,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 발전 등을 통해 경제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자산 시장 발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 가격 급락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시장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 부채 문제와 중소기업 대출 급증 문제가 민간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인 RP 제도의 성공적 정착, 은행권의 무분별한 CD나 은행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채권 지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경제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기와 5월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인기영합적 정책이 도입되는 것을 경계하여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의 경험을 교훈삼아 과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통해 남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을 리스크 완화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통일경제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지원 정책과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 차원의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경제 회생 및 대외 개방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이행 유도가 필요하다
우선 신사업 분야에 대해 초기 시장 여건 조성, 기업간 과잉 중복 투자 방지, 투자 자금 재원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이행 유도를 위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규범적 책임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법을 뛰어넘는 책임 수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내부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구시대적 정신을 버리고, 문화적 생활공동체로의 변화와 함께 다원적인 시야와 편견 없는 자세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 (cosmopolitan)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 민족의 보편적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들도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첫째 미래 기업의 신수종 사업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새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신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신수종 사업화가 가능한 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신사업 확보는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M&A, A&D, 전략적 제휴,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신사업으로 지식 서비스 시장과 대북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외 지식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북 사업의 경우 기업은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SOC 투자 사업, 남북 IT 교류 활성화 사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수익성·경제성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셋째 외연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모방과 외연 확대 경쟁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는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별화된 사회 공헌 방안 및 윤리경영의 자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업문화로 내재화하여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경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과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하여, 거래선 다변화,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 헤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기관의 경우 증권, 은행, 보험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은 맞춤형 상품 개발 추진, 해외 진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생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2008년 10대 국내 트렌드 >

<p>개 요</p>	<p>■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에 예상되는 국내 10대 트렌드를 선정</p>
<p>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p>	<p>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p> <p>부동산 딜레마 가속</p> <p>新4高 역경의 가중</p> <p>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p> <p>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p> <p>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p> <p>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p> <p>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욕구 증대</p> <p>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p> <p>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p>
<p>정책적 시사점</p>	<p>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 둘째, 경제 위기 가능성 차단 셋째, 인기영합주의적 정책 생산 금지 넷째,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 다섯째,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유도 여섯째, 다민족 사회의 내부 갈등 해소</p>
<p>기업의 대응 방안</p>	<p>첫째, 미래 신수종 사업 확보에 주력 둘째, 지식서비스 및 대북사업 검토 셋째, 혁신주도형 기업화 추진 넷째, 체계적 대외 리스크 관리</p>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에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거시 경제 부문에서는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부동산 딜레마 가속, 新4高 역경의 가중(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의 4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08년 산업 부문의 새로운 트렌드로는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등을 들 수 있음
 - 경영 부문에서는 책임있는 기업(The Responsible Company)에 대한 욕구 증대를 선정함
 - 사회 부문에서는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이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1) 거시 경제

①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 (현상) 한국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명목 GDP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선진국가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 200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8,37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추계인구 등을 고려할 때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1,432 달러를 기록하며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355달러로 후퇴한 후 2000년 10,841달러를 기록하며 1만 달러시대에 재진입한 이후 7년 만에 2만 달러대에 진입
- 2008년 명목 GDP 1조 달러 상회 : 일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2006년에 8,874억 달러이며, 2007년에는 9,000억 달러대 후반을 기록하고 2008년에는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명목 GDP는 1970년 81억 달러에서 1986년 1,113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6년 5,173억 달러로 5,000억 달러를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06년에는 8,87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최근 4년여 간의 저성장 국면에서도 연평균 약 850억 달러 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에는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 소득 수준 세계 40위, 경제 규모 10위 권 :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는 세계 40위 내외, GDP 1조 달러는 약 10위 내외의 경제 규모 수준임
 - 2006년 기준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690달러로 세계 40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을 기준으로 명목 GDP 1조 달러는 세계 GDP의 약 2.1% 수준에 해당되며, 브라질이 약 1조 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전망)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이 선진국가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비효율성, 투자 정체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 등으로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아너스 클럽¹⁾에 이르기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중진국 위치 고착화 우려 : GDP 1조 달러 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들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중진국 위치가 고착되어 갈 수도 있음

1)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의 18개국이 포함됨.

- 아너스 클럽 국가들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1998년 20,415달러에서, 2000년 16,641달러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어 2004년에는 25,396달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소득 수준의 격차가 확대된 2000년 이후의 시기가 국내 투자 부진으로 자본 축적이 저하되는 시기와 동일하여,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부진에 의한 성장잠재력 고갈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 (시사점)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높여 아너스 클럽에 빠른 시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동시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경직적인 노사 관계 개선, 물류비용 축소,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 발전 등을 통해 경제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함
- 기업은 지금과 같은 외연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핵심기술 개발 노력 경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영업 관행 정착, 국제 회계 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 > 명목 GDP 및 1인당 국민소득의 세계 순위 (2006년 기준)

GDP			1인당 국민소득		
순위	나라	금액(억 달러)	순위	나라	금액(달러)
1	미국	132,018	1	룩셈부르크	76,040
2	일본	43,401	2	노르웨이	66,530
3	독일	29,067	3	스위스	57,230
4	중국	26,681	4	덴마크	51,700
5	영국	23,450	5	아이슬란드	50,580
6	프랑스	22,307	6	미국	44,970
7	이탈리아	18,448	7	스웨덴	43,580
8	캐나다	12,515	8	네덜란드	42,670
9	스페인	12,240	9	핀란드	40,650
10	브라질	10,680	10	영국	40,180

자료: World Bank.

② 부동산 딜레마 가속

○ (현상)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지만 버블 요인이 상존해 있어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침체 : 2006년 말부터 연이어 나온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은 침체 국면에 빠짐
- 부동산 경기 경착륙 우려 :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미국발 주택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버블 요인 상존 : 대선 이후 새 정부에 의한 주택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국토 개발 등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따른 주택가격 불안 요인 잠재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증가된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도 주택 가격을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전망)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정책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부채 증가 : 가계부채 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선진국 등에 비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단기 조달 비중이 크며, 시상환방식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
 - 2006년말 기준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미국 3.16, 한국 2.12이며, 개인총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는 미국 1.39, 한국 1.52 등 가계부채가 미국보다도 악화되고 있음
- 중소 건설업체 도산 :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호황 때 착공되었던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방의 주택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 중견 건설업체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음

- 2007년 11월말까지 일반 건설업체 109개가 도산했으며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모두 278개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등 건설업체 도산이 급증
 - 신용경색 심화 : 은행 예금이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의 단기 외화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담 등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을 엄격히 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바젤 II 시행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속되고 있으며, 만기 도래되는 가계대출의 재 대출 여건도 악화
 - 금리 상승 기조 : 각종 대출금리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상승과 가산금리 인상으로 2005년 6월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 이러한 금리 상승은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지면서 주택수요와 설비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
 - 대규모 공공사업 지속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서도 국토균형개발 등을 위해서도 대규모 공공사업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로 물류비, 공장 및 사무실 땅값, 근로자의 주거비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효율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균형 개발이 시급함
- (시사점)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대선 이후나 2008년 총선에서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을 자제하여 부동산 버블의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급락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국공유지로 대상을 한정해야 할 것임
 - 한편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대출규제 등과 같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할 것임

③ 新4高 역경의 가중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

○ (현상) 2007년에 들어 한국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의 신4고에 직면함

- 고유가 : 국내 원유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2월 14일 현재 배럴당 87달러로 2006년 말 57달러에 비해 53% 상승함
- 고금리 :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국고채(3년물) 이자율이 2007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월 14일 현재 연초 4.93% 대비 0.96%p 상승한 5.89%를 기록함
- 고원화가치 : 원/달러 환율은 2007년 1월에 평균 936.36원에서 11월 평균 현재 916.98로 2.1% 하락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2.1% 절상)
- 고물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1월 전년동월대비 1.7%에서 11월 현재 3.5%로 1.8%p 급등함

○ (전망) 新4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구조적 원인에 의한 국제 유가 급등,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에 의한 국제 금융 시장 불안 등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국제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급증과 원유 생산 능력 저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투기 자금의 시장 유입 등 고유가 요인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유가가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 자금 수요 완화와 함께 은행권은 CD와 은행채 발행을 줄이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대출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가 예전 수준보다는 높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미 서브프라임 문제 확산으로 인한 달러 약세, 한미 금리 격차에 확대에 의한 해외 자본 유입 등의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화 가치의 추

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업제품 가격 상승,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 고물가 요인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하며, 기업은 원자재 및 환율 등의 시장 변동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정부는 금융 시장 변동성 축소와 물가 안정을 통해 민간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임
 - 금융 시장 변동성 축소 :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금리와 실질 금리 간 과도한 괴리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의 강화도 요구됨
 - 물가 안정에 주력 : 물가 급등 압력에 대응하여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난방유 세율 대폭 축소와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과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하여, 거래선 다변화,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 헤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참고 > 최근 국제유가, 금리, 환율, 물가상승률 추이

	2006년	2007년			
		1/4	2/4	3/4	12월
두바이유가 (달러/배럴)	56.71	54.99	64.79	70.00	87.31
국고채(3년) 금리 (%)	4.92	4.76	5.26	5.46	5.87
환율(종가 기준) (₩/\$)	929.80	940.30	928.32	932.41	927.70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2	2.5	2.3	3.5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기말 기준

2) 2007년 4/4분기 자료는 두바이유가 12월 14일, 국고채 금리 12월 17일, 환율 12월 1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11월말 기준임.

④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

○ (현상)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의 성장우선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분배위주 경제정책 비중을 높여 왔으나,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시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분배 중심 경제 정책 지속 : 2000년 재정지출 중 8.1%와 27.3%를 차지하던 복지부문과 경제개발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2006년에는 각각 10.6%와 20.8%로 변화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이 2000년대 들어 성장우선에서 분배위주로 전환됨

- 분배 중심 경제 정책의 실효성 미흡 : 그러나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소득 분배 문제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 하였을 뿐더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함

· 소득 5분위배율(5분위소득/1분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7.23배에서 2006년 현재 7.64배로 상승하여 분배위주의 경제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음

· 한편 2006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2만 3천여 건으로 인구 천명당 2.6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 1만 2천여 건에 비해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임

· 본 연구원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분배위주의 경제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우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적으로 거세어지고 있음

○ (전망)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존재

- 성장 중심 경제 정책으로의 회귀 : 2008년에는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공공 건설 경기 부양, 조세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그러나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 소비자신용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2002년의 소비 버블과 이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촉진시켰던 경험 있음
 - 따라서 만약 과도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경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시사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배위주에서 성장우선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정책 시행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안정 성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배제하고, 신성장 산업의 조기 발굴 및 육성,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 근본적인 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정권 교체기와 5월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인기영합적 정책이 도입되어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기업들은 정부가 향후 내놓을 경제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가 육성에 중점을 두는 신산업·신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전망을 통해 미래 기업 성장 동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참고 > 최근 복지과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회보장	7.1 (8.1)	10.8 (10.9)	10.7 (9.8)	11.7 (10.0)	13.0 (11.0)	13.7 (10.2)	15.4 (10.6)
경제개발	23.9 (27.3)	25.5 (25.8)	32.0 (29.4)	32.5 (27.7)	30.8 (26.0)	28.2 (21.0)	30.1 (20.8)
총재정지출	87.5	98.7	108.9	117.2	118.2	134.2	144.8

자료: 기획예산처.

주: ()내는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산업

⑤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 (현상) 국내 기업들은 신수종 사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원 확보 노력을 지속 중

- 국내 기업들의 최대 현안은 핵심사업(core biz) 강화와 신사업(new biz) 발굴에 의한 '신성장 동력 확보'임
 - 이는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성숙 업종이 증가하면서 신성장 동력원 확보가 절실했으며, 기술 발전으로 미래 신수종 사업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최근 수년간 주요 기업들은 신수종 사업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전환에 투자를 확대함

○ (전망) 신수종 사업 확보 수단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 M&A를 적극 활용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및 R&D 강화 전략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신수종 사업 투자 적극적 : 신수종 사업으로는 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 사업, 첨단신소재 개발, 금융업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두산, 금호, 유진 등 중견그룹들이 M&A를 통해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중임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4대 그룹 역시 삼성이 대체에너지·바이오, 현대차는 금융 등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주요 경영 방침으로 정함
- 국내외 M&A 시장 활성화 지속 : 약 3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M&A 시장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발한 M&A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의 적극적인 M&A 의지,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사모펀드의 수요 측면과 함께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기업들,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금융기관 간 합병연횡 등 풍부한 M&A 매물에 대한 공급 시장이 대기 중임
 - 특히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의한 In-Out형 M&A가 지속될 것이며, 정

- 부도 규제 완화 등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 중임
 - 다만 국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대출시장 침체와 같은 유동성 압박 등은 M&A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확대 : 기존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신시장 개척 및 합작 사업의 확대가 예상됨
 -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수종 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경쟁력을 갖춘 성장 주도 사업의 고도화로 확실한 수익원(cash cow)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신규 사업 구상 역시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강구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이른바 ‘업(業)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경쟁 관계인 벤츠-BMW, 삼성전자-소니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기술력 공유를 이뤄 글로벌 경쟁력에 대처하는 사례와 같이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전방위 R&D 강화 : ‘핵심 기술과 자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확대가 예상됨
 - 산업간, 기술간 융합으로 신제품·신시장의 창출을 지향하고, ‘핵심 사업’보다는 ‘핵심 기술과 자산’을 통한 사업 재편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예산, 설비, 인력 등 전방위 R&D 강화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이밖에 잉여자금의 투자활성화 측면이나 사업상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A&D(Acquisition & Development)를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시사점)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면밀한 사전 투자 수익성 검토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축소시켜야 할 것임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신사업의 시장 형성, 투자자금 재원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

- 정부 조달 확대, 구매 지원금 지급, 정부 보증 등으로 초기 시장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특정 산업과 품목으로 투자가 몰려 과잉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 산업 전망과 투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임
- 기업은 처해 있는 경영 여건에 맞추어 M&A, 전략적 제휴, R&D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됨
 - 새로운 수익원을 얻으려다 과잉 경쟁과 중복 투자가 초래될 우려도 있어 자칫 기존 사업까지 경영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함
 -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M&A, A&D, 전략적 제휴,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신수종 사업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 수익성 검토 및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함

⑥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²⁾

○ (현상) 국민 소득 향상, 고령화 진전, 웰빙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디자인, 패션, 컨설팅, 의료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이 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 지식 서비스 산업의 정의 :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서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디자인, 컨설팅, R&D 등), 교육, 의료 산업이 이에 해당함(산업자원부)

- 특히 산업자원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성장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도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로 들 수 있음

○ (전망) 지식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제조업과의 융합 가속, 경험과 감성의 서비스 산업화 진전 등이 기대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심화될 것임

2) 본문 내용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신문 등의 각종 보도자료 등을 참조로 작성.

- 규모의 확대 : 향후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GDP의 26%, 전체 고용의 23%를 차지

- 제조업과의 융합 가속 : 제조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 제조업 자체의 서비스화 등이 진전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
 -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이동하는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자동차 디자인, 성능 등에 접목하여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자동차를 제공
 - 환경 산업의 경우도 환경 컨설팅이나 배출권 거래와 같은 서비스화가 환경 설비 산업과 함께 동시 진행되는 등 제조업과의 융합이 가속
 -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가 신제품이나 고기능을 선호하기보다 타인 또는 타 상품과의 차별성이나 감성을 중시함에 따라 상품 개발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

- 고령화에 따르는 지식 서비스 산업 간 융합 가속 : 최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자산 관리 및 운용,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지식 서비스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요양시설 등 간병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단위의 단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건강이나 보험에 관한 어드바이스, 노후의 자산 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Senior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Private Concierge³⁾ 서비스가 확산

- 아웃소싱 지식 서비스 기업의 성장 : 과학기술의 산업화나 산업기술의 과학기술화에 의한 외부 R&D 역량 활용 필요성 확대, 상품이나 건물 등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아웃소싱 지식 서비스 기업이 성장
 - 최근 기술융합의 급속한 진전, 바이오나 나노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수준의 향상 등으로 R&D 전문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가 확대

3) Concierge란 프랑스어로 '안내인'을 말하는데 원래 유럽의 호텔에서 손님의 방 열쇠를 관리하는 문지기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차차 손님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함.

- 상품이나 건물 등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토털 디자인 컨설팅 기업 등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해외 진출 확대 : FTA 등에 의한 시장 확대로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임
 - 지난 21일 체결된 '한·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으로 향후 이 지역 국가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내 지식 서비스 산업의 ASEAN 진출이 확대될 것임
- 경쟁 심화 : FTA 등에 따르는 국내 시장 개방 가속화로 국내 지식 서비스 기업들과 미국이나 FTA 체결 대상 지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임
 - 한·미 FTA로 미국의 지식 서비스 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지식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임
- (시사점) 기업들은 기존 비즈니스의 서비스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의 고부가가치화 뿐 아니라 신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기존 비즈니스의 서비스화 : 기존 비즈니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련 분야 사업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IT 등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기존 비즈니스의 지식 서비스화를 추진
 - 해외 진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 선진 지역과의 FTA로 국내 지식 서비스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응하기 위해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⑦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 (현상) 은행의 수익 기반 약화,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방카슈랑스 진행·생보사 상장 허용 등에 의해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관행이 무너지면서 은행·증권·보험 간 재편 및 경쟁이 심화될 것임

- 은행권의 수익 기반 약화 : 예대마진 하락, 증권업의 높은 CMA 수익률 등에 의해 수익성이 한계에 이른 은행계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필요함
-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앞두고 위탁매매 의존 영업에서 자산관리와 자기자본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이 추진될 것임
- 방카슈랑스, 생보사 상장 : 방카슈랑스에 의해 전통적 영역을 빼앗긴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계기로 대형화와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전망) 자산관리 경쟁 심화, 복합금융점포 증가와 같은 공통 영역 경쟁이 치열해지고 M&A 시장 본격화, 국내 금융업계 지각 변동, 리스크 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자산관리 경쟁 심화 : 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부문과 증권업의 자산관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고객 정보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새로운 수익 확보의 일환으로 프라이빗 बैं킹 부문을 강화할 것임
 - 증권업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자산관리연구소 개설, 새로운 상품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려고 할 것임
- 복합금융플라자 증가 : '복합 점포'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08년에도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임
 - 금융기관 M&A에 따라 동일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 또는 보험과 증권사 점포를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생보사 상장에 의해 보험 업계도 생보사를 중심으로 복합 점포 개설이 본격화될 것임
- M&A 시장 본격화 : 은행, 증권, 보험 내 M&A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에서 사라지는 금융기관들이 속출할 것임
 - 은행은 투자은행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권사 M&A 또는 신규 진출을 통한 증권업 진출이 2008년 중 구체화될 것임

- 증권업에서는 자기자본투자 등의 부문에서 자본력과 자산운용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형증권사의 중소형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M&A가 추진될 것임
 - 보험업에서는 2007년 생보사 상장 허용에 따라 2008년 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면 다른 금융권과 경쟁하기 위해 생보사간 본격적인 M&A가 이루어질 것임
 - 국내 금융업계 지각 변동 :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지각 변동이 예상됨
 - 증권사의 경우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의 겸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 전망됨
 - 한편 최근 손해보험시장 또한 외국 자본과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은행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업계가 재편될 것임
 - 리스크 증대 : 2008년에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 파생상품과 같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 대두 등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금융자산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임
- (시사점) 증권, 은행, 보험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은 맞춤형 상품 개발 추진, 해외 진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공학의 발달에 의해 영역이 사라지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나 서비스의 맞춤형 전략이 요구됨
 - 은행, 증권, 보험업은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 신흥 지역에 진출하여 수익 확대를 도모해야 함
 - 기업 금융, 자원개발 금융 상품 특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별 특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함
 -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로부터 금융 기관들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기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경영

⑧ 책임있는 기업(The Responsible Company)에 대한 욕구 증대

○ (현상)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책임있는 기업이란 고객,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업의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의미함
 - 국제표준화기구는 2009년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진행 중임⁴⁾
-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정보 환경의 진보에 따라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된 소비자들의 응집력 증대로 기업책임의 이행에 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사회적으로도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과 납세 의무의 이행, 환경에 대한 고려 등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전망) 제품 측면에서 제조 책임의 범위 확대, 종업원 측면에서 경영가족주의의 확산,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사회공헌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예상

- 제조 책임의 범위 확대 :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 안정성과 사회적 효용 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 제조 책임으로 확대될 전망
 - 제조자가 정한 기준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만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조 책임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4)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표준을 개발을 골자로 하는 'ISO 26000' 제정을 진행 중이며, 핵심 이슈는 환경, 인권, 노동문제, 조직지배구조, 소비자 이슈, 공정한 조직운영, 공동체 참여 등 7개 분야임.

- EU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⁵⁾’ 등 제조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경영가족주의의 확산 : 기업은 종업원을 진정한 자산으로 여기며 온정을 베풀고,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할 것임
 -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의 보람’ 등 비경제적 동기부여 방안을 디자인하고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질 것임
 - 도요타의 성장 배경에는,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영가족주의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었음
- 사회공헌 비즈니스의 활성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창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전망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히 자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기 비전이나 전략 목표와 연계시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Strategic Philanthropy)으로 변모하고 있음
 -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P&G는 제3세계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정화제 사업을 사회공헌 비즈니스로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시사점) 정부는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은 사회와 국민에 대해 책임있는 기업으로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
- 정부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규범적 책임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법을 뛰어넘는 책임 수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방안과 공익연계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자체적 평가기준 마련하고 기업문화로 내재화하여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주력해야 함

5)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EU로 들어오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4) 사회

⑨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 (현상) 건국 60주년과 남북 경협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갈등 해소와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신경협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남북 경협 20주년 : 2008년은 새정부 출범과 대한민국 건국 및 남북 분단 6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며, 1988년 7.7 선언에 의해서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 20주년과 맞물려 있음

· 한국의 新성장 동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재평가하고 성공적인 새로운 모델 제시의 필요성 고조

- 남북 경협 확대가 민족 경제 균형 발전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 해소의 첩경임

· 경협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군사 보장 등의 남북 갈등 요소는 여전히 신경협 시대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

○ (남북 경협 환경의 변화)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범·제도적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인프라 확충 등의 경협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남북 경협은 기존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투자 지역과 협력 업종의 확대 기반 마련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체계 및 제도적 지원책 등이 남북총리 회담과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의 후속 합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와 연계된 경제재건'을 강조하는 등 대외 관계 강화와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시사하고 있어, 경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북한경제 회생 방안에 집중되고 있고 한

반도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경협 활성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경협 진전이 기대

- 다만 핵 불능화 수준 및 상응조치 등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 및 6자회담 회원국들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정체 될 경우, 이는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새정부 출범 초기 남북 양자간의 勢 싸움으로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 될 경우에는 북미 간의 북핵 진전 속에 정치·군사적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 를 보이면서 자칫 남북 경협의 정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남북 신경협 시대 도래 기대) 2008년에는 기존의 경협 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경협이 활성화되고, 특히 SOC 사업관련 기회가 대폭 증가 하여 재계·지자체의 대북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재계·지자체들의 참가로 경협 분야 확대 : 남북정상선언과 남북 간 민간경협 기구인 '남북경협민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재계 및 지자체들의 대북 사업 추진 활발
 -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 및 해주특구 개발, 북한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 물류 합작 사업, 종합물류유통센터 건설 등 새로운 분야의 경협 사업 확대
 - 중소기업들이 남북 건설사 합작회사 진출 등을 통한 북측의 SOC 개발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보여, 재계의 대북 사업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 경협 인프라 개선 : 도로·철도 및 통신 등의 연결로 경협 인프라가 개선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단계 진입 기대
 - 개성~신의주 철도 연결,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로 한반도중단철도 (TKR)가 연결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6)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북한이 핵 포기과 개혁·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1인당 3,000 달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구상으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5개 분야의 포괄적 대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재원 조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 본격적인 경협 확대 여부의 관건

○ (시사점) 경협을 통한 리스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틀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북투자, 공공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증대 방안 모색

- 정부는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 하에서 북한을 리스크 완화 대상만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 및 경협 사업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함
 - 또한 통일경제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지원 정책과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 차원의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북한 경제 회생 및 대외 개방 유도에 대한 추진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기업은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북 사업의 수익성·경제성을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남측의 대북 사업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는 대북 협상력 약화와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합의 내용 존중 및 정부·재계 간의 사전 협의 조정이 필요함

⑩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

○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은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음

- 체류외국인의 수치가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의 2%를 넘게 되었고, 1999년 대비 2.6배로 증가하는 등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 참고 > 연도별 체류외국인 증감 현황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8
체류외국인(명)	386,972	381,116	566,835	678,687	747,467	910,149	1,000,254

- 이 가운데 장기체류외국인은 724,967명인데, 외국인근로자가 56%(404,051명), 결혼이민자가 14%(104,749명), 외국인 유학생이 7%(47,479명)임
 - 불법체류외국인도 225,273명으로서 지난 1997년 148,048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게 된 데는 우리 내부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지난 90년대 이후 우리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3D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임
 - 결혼 이민자도 남아선호사상과 태아감별 등으로 남녀 출산 성비가 크게 벌어지면서,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강도 높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수집단으로 세력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미 곳곳에 자리 잡은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들이 빈민가로 전락하고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이들의 세력화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는 불안이 조성되고 있음

-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범죄 문제가 과장되고, 일자리 부족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외국인 혐오 현상,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장기실업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외국인을 증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심각한데, ‘유럽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감시센터’(EUMC)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영국에서 제노포비아 관련 범죄가 5만 여 건, 독일에서는 1만 2,000건이 발생했다고 함

- (시사점) 한국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문화 다원성에 대한 시민교육은 물론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적 생활공동체로의 변화와 함께 다원적인 시야와 편견 없는 자세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cosmopolitan)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의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민족의 보편적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원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미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숙련 고급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2008년 예상되는 국내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위협 요인 :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화 지속, 부동산 딜레마 가속, 新4高 역경의 가중,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욕구 증대, 다문화 시대의 신 갈등 구조 부각 등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회 요인 : 반면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선회,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등 같은 기회 요인도 병존할 것임

○ 따라서 2008년 예상되는 국내 10대 트렌드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1) 정책적 시사점

○ 새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어야 함

-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동시에, 과도한 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함

- 경직적인 노사 관계 개선, 물류비용 축소,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 발전 등을 통해 경제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금융·자산 시장 발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 가격 급락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시장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가계 부채 문제와 중소기업 대출 급증 문제가 민간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인 RP 제도의 성공적 정착, 은행권의 무분별한 CD나 은행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채권 지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경제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정권 교체기와 5월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인기영합적 정책이 도입되는 것을 경계하여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직후의 경험을 교훈삼아 과도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특히 대선 이후나 2008년 총선에서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을 자제하여 부동산 버블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것임

○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통해 남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함

- 통일경제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지원 정책과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 차원의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 하에서 북한을 리스크 완화 대상만이 아

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 및 경협 사업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함

- 대북 투자·지원 정책과 남북한 산업 협력 및 지역 개발 차원의 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북한 경제 회생 및 대외 개방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이행 유도가 필요함

- 신사업 분야에 대해 초기 시장 여건 조성, 기업간 과잉 중복 투자 방지, 투자 자금 재원 마련 및 기술 개발 지원이 요구됨

- 정부 조달 확대, 구매 지원금 지급, 정부 보증 등으로 초기 시장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특정 산업과 품목으로 투자가 몰려 과잉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 산업 전망과 투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임

-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의 이행 유도를 위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규범적 책임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법을 뛰어넘는 책임 수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내부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함

- 단일민족국가라는 구시대적 정신을 버리고, 문화적 생활공동체로의 변화와 함께 다원적인 시야와 편견 없는 자세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cosmopolitan)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의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미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숙련 고급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민족의 보편적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원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2)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수종 사업 확보에 주력해야 함

- 새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신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신수종 사업화가 가능한 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M&A, A&D, 전략적 제휴,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신수종 사업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 수익성 검토 및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신사업으로 지식 서비스 시장과 대북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비즈니스의 서비스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국내외 지식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도 경주해야 함

- 대북 사업의 경우 기업은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SOC 투자 사업, 남북 IT 교류 활성화 사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수익성·경제성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연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기술 모방과 외연 확대 경쟁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함
-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영업 관행 정착 및 국제 회계 기준에 맞는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 차별화된 사회공헌 방안과 공익연계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자체적 평가기준 마련하고 기업문화로 내재화하여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주력해야 함

○ **경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함**

-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과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하여, 거래선 다변화,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 헤지에 주력해야 함
- 특히 금융 기관의 경우 증권, 은행, 보험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은 맞춤형 상품 개발 추진, 해외 진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생존 전략 수립이 시급함

경제연구본부 (3669-4121, swha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원재료 가격 급등세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1월 원재료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31.0%(전월 대비 7.5%) 상승하고 중간재도 석유관련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2%(전월대비 1.4%) 상승하는 등 국내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원유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2.0%(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 재화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측정지표인 최종재는 과일, 채소류의 지속적인 출하증가로 농림수산품이 내렸으나,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2.9%(전월대비 0.5%) 상승하였음
-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11월에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0.5%)의 상한선에 도달한 소비자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가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4)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2.9	4.5	7.1	5.3	8.6	7.9	-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1.9	3.3	-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104.7	-
		수출	12.0	14.4	16.3	13.8	14.7	14.1	9.5	23.1	17.5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17.8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75	2,374
		실업률(%)	3.7	3.5	3.3	3.2	3.6	3.2	3.1	3.0	3.0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5	7.2	27.3	26.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26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2	46	19	21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2.2	2.1	2.4	2.3	3.0	3.5	
	생산자물가	2.1	2.3	3.1	2.0	1.8	2.5	2.7	3.4	4.4	
	생산자물가	3.9	4.8	5.8	1.8	2.1	3.3	2.5	7.8	12.0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1.6	2.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잔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상승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금리 큰 폭 하락

- 금리: S&P의 채권보증기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4.15→ 4.05%)
- 환율: 달러화는 미국 주요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규모 확대 전망에 따른 위험 회피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소폭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약세 시현 (\$/€ :1.4430→1.4330, ¥/\$:113.3→113.1)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원화가치의 트리플 약세

- 주가: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1,839.8p까지 하락하였다가, 기관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하락 (1,895.1→ 1,875.4)
- 금리: CD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요인으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89→5.81%)
- 환율: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본국 송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유사 등 수입업체의 결제수요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확보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930.1→940.7원)

○ (전망) 연말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4	3/4	4/4	1/4	2/4	3/4	12.14	12.21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5.1	1,875.4
	국고채3년(%)	4.92	4.57	4.92	4.76	5.26	5.46	5.89	5.81
	원/달러	948.9	946.2	929.8	940.9	923.8	915.1	930.1	940.7
해외	DOW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340	13,246
	Nikkei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515	15,032
	미국채10년(%)	5.14	4.63	4.70	4.57	5.02	4.59	4.15	4.05
	일국채10년(%)	1.93	1.68	1.69	1.60	1.88	1.69	1.56	1.53
	달러/유로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430	1.4330
	엔/달러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3.28	113.13
	두바이(\$/바렐)	67.17	57.33	56.71	63.12	66.42	76.64	87.88	87.0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20) 기준